정책질의서

각 해당 문항에 대해 1), 2)중 하나를 선택하여 () 기입해주시고 그 구체적인 이유나 의견을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각종 여론조사상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에 대한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문제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독자적인 [부패방지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부패방지법]의 원안대로 <내부자고발>를 철저히 보호 하는 법안으로 부패방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 2) 부패방지법의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내부고발자보호> 문제는 신중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부정과 부패의 시작은 정치인들에 의해 생겨났다고 봅니다.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건전해 진다고 봅니다.
- 2.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서해안의 간척사업은 경기도의 시화호 오염사 태에서 보여지듯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갯벌 보전의 여론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많은 반대의견과 제 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 려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 1) 새만금간척사업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국 민의 여론을 모아 계획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2)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계속진행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갯벌은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원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부영

양화된 하천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화라는 유기적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즉 이러한 작용터인 갯벌이 파괴되면 물의 순환이 약한 서해의 경우는 수 십년 내에 국은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관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3.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많은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매우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귀하께서는 지구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직선거 출마자 내천, 공천에서 여성후보의 비율을 30%이상 보장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실적으로 인물의 부족과 지구당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지방자치선 거에서는 각종 의원의 내천, 공천에서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하겠습니다.(○) 2) 인물의 부족과 지구당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여성후보의 30% 이상 공천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현실적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유럽의 여러나라, 특히 미국 국무장관의 경우도 여성입니다. 사회는 여성의 진출을 원하고 있고 또 전출해야만 합니다.
- 4. 우리나라는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평균 45.9시간, 세계8위)과 세계최고수준의 산업재해들,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IMF이후 장기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2)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노동시간의 단축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현제 IMF라는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임금과 많아진 근로시간의 조정이 선행된 후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장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5. 우리는 오랜 군사정권하에서 인권침해국,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권신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인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 설치를 두고 정부는 법인적 성격의 민간기구로, 인권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정부의 인권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법무부의 산하 허수아비 기구로 전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국가적 인권침해가 가능한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합니다.(○)
- 2) 인권위원회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를 보충하기 위한기구이며 인권보장에 관한 제1차적·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충하는 책임만 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를 할 인권위원회를 민간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 6.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고교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지역은 고교입시 비평준화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경기도내 고교 입시 평준화지역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합니다.()
 - 2) 반대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학교는 경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알

고 사회를 배우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게 때문입니다. 특정고니 특정지역이니 하는 학연.지연도 특권의식을 가진 특정학교출신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열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배우는 터전이 되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7.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심의기구가 바람직합니다.(○)
- 2) 자문기구가 바람직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학문의 전 당으로서의 접근보다는 사업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단에 의한 운영은 결국 폐단을 부르게 되고 이 폐단은 부폐로 이어지기 마련입 니다.

8. 국민들은 이번 여야 공천과정이 지구당내에서의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보스중심의 밀실, 정실공천으로 귀결되었다며 공천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만약 당선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자(추천자)를 당내민주주의를 위해 지구당내의 경선(예비선거를 포함한)을 통해 선정하는 것에 대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합니다.()
- 2) 반대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지역구는 지역민의 반영체가 되어야 하고 민의를 반영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선을 통한 대표자 선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천후유증을 사전에 막는 장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한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르되 외국군대가 주둔한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 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 공 차원을 넘어 한국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현재 SOFA는 미군범죄의 수사권, 기지 사용료 부담, 환경권등의 거의 모든 조항에서 불평등한 협정이므로 곧바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 2) 분단현실에서 한미간의 공조협력체계가 필요하므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
- * 구체적인 사유는 ? 미국 눈치보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미사일 하나 개발 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 니까? 기본이 바로되면 차후 문제들도 실마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 10. 국가보안법은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과 부적정성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의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당연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 2)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현실을 볼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전면적인 폐지는 반대지만 독소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해석에 따른 집행남용을 막을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11. 현 지방자치법(99년 8월 31일 개정)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결과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1994년에 도입된 주민투표제는 명목상 조항으로만 남아있고 실질적

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화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는 주민투표의 발의여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며 주민투표의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문적 주민의견 조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인 주민투표제가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와 시 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찬성한다.()
- 2) 반대한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요즘 선진국에서는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바르고 현명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12. 현재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월 9일 통과된 개정된 선거법이 87조의 부분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운동을 가로막고 유권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가로막는 선거법 58조, 254조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1) 사실상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 되어야 합니다. (O)
- 2)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13.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 전체수입곡물의 10% 이상이 유전자 조작품종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일차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표시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제 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2)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정성 여부보다는 믿음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14. 올해 초 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구성되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사이에 선수협의회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는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의 결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1) 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프로야구 구단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
- 2) 현재 프로야구 구단들의 재정상태나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부 선수들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구성은 성급한 일입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구단주들은 적자상태라고 주장하며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협의회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부적 문제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손해보는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프로야구의 광고효과는 적자를 보전하고도 이익의 개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5. 귀하가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입법활동과정에서 당론과 개인적 의견이 배치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1) 개인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 2) 당론에 따르겠습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기본적 당론에 위배되는 활동은 자제가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16. 마지막으로 귀하는 경기도내의 가장 큰 현안 내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무응답